

성장과 혁신을 여는 지속가능금융의 초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일시: 2025년 10월 15일 14:00 - 17:15

주관: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기조연설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

발제

ISSB 기준 도입 현황 및 정책적 리더십

샘 프레스티지 ISSB 전략 리드

호주 AASB의 기후공시 제정 경험과 단계적 이행전략

라클란 맥도널드-커 AASB 실장

일본의 단계적 지속가능성 공시체계와 금융시장 전략

코이치로 쿠라모치 일본 금융청 수석회계관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제정 현황과 향후 과제

이웅희 KSSB 부위원장

Q&A

본 리포트에 담긴 정보에는 해당 ESG 이벤트의 콘텐츠가 포함되어있으며, 이 콘텐츠의 견해 및 보증은 해당 행사주최측의 책임으로 당사는 게재콘텐츠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해 일체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저작물의 텍스트, 이미지 및 레이아웃은 임팩트온이 저작권을 가지며, 임팩트온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본 저작물의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master@impacton.net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Executive Summary

본 행사에서는 주요 공시기준 제정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과 각국의 제도 이행 전략을 공유함. ISSB의 글로벌 기준 확산 현황과 일본 및 호주의 법제화 추진 방향, 그리고 한국의 향후 공시체계 마련 계획 등 각국의 정책·제도적 준비 현황이 심도 있게 논의됐음. 이번 포럼은 국제 기준의 조화로운 정착을 통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 제도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 지속가능성 공시를 경제 성장과 금융 혁신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key takeaway 1 글로벌 정합성 확보는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신뢰 기반임

- ISSB, AASB, SSBJ 등 주요국 기준 제정기관들은 모두 ISSB 기준을 중심으로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상호운용 가능한 표준을 구축하는 것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의 정보 경쟁력 확보의 핵심임
- 특히 일본과 호주는 ISSB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각국의 산업 구조와 공시 역량에 맞는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병행함

key takeaway 2 단계적 이행과 실효성 중심의 접근이 공통된 과제임

- 공통적으로 강조된 것은 ‘속도보다 질’. 기업의 수용성과 준비 수준을 고려해 공시 의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검증제도를 시차를 두고 도입하는 방식이 실효적임
- 일본은 1년 유예 후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한국도 선택공시와 유예기간을 병행하는 단계적·비례적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있음

key takeaway 3 공시가 ‘규제’가 아닌 ‘기회’의 영역으로 전환

- 한국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단순한 보고의무가 아니라 혁신·산업전환·금융 신뢰를 잇는 성장 인프라로 규정함
- 공시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 정부가 동일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 제고와 장기투자 활성화라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함. 이는 단순한 ESG 정책을 넘어 경제 체질 전환과 생산적 금융의 기반으로 공시제도를 바라보는 방향성을 명확히 함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

기조연설

(지속가능성 공시의 시대적 전환점)

지속가능성 공시는 이제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고 수준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하고 있음. 공시기준의 통합 필요성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높음. ISSB 기준은 국제회계기준(IFRS) 체계 아래에서 설계돼,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동일한 정보기반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게 함

과거 지속가능보고 체계는 여러 기관과 프레임워크가 병존하면서 ‘알파벳 수프(alphabet soup)’라 불릴 만큼 복잡하게 분절돼 있었음.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국가별·산업별 정보 차이를 해석해야 했고, 이는 시장 효율성 저하로 이어졌음. ISSB의 출범은 이러한 중복 구조를 해소하고, 전 세계 자본시장의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실질적 시도였음

ISSB는 S1(일반 공시요건)과 S2(기후 관련 공시요건)을 통해 기업이 단일한 공시체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비교가능한 데이터 제공을 목표로 함. 지속가능성 공시가 이제 규제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신뢰의 언어로 기능하고 있음

(글로벌 정합성과 정책 연계의 중요성)

ISSB 기준은 각국의 제도와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상호 호환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즉, 국가별 제도 차이를 인정하되, 공시 구조의 핵심 원칙이 공유돼야 한다는 것임. 특히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과 ISSB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논의가 핵심 선례가 될 것임. ISSB와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현재 항목별·문단별 정합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는 향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제도 설계 시 참고할 수 있는 구조적 모델이 될 것임

공시기준의 정합성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 흐름의 안정성도 보장함.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기업들은 불필요한 이중 보고 부담을 줄이고, 다국적 투자자들은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정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 이는 투명성이 곧 경쟁력이라는 메시지로 요약됨. 아울러 ISSB의 기준이 단순히 기후 리스크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자연자본·인적자본 등 비재무요소로 확장될 것임. 이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 가치창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통합적 보고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ISSB의 궁극적 목표임

(아시아의 역할과 향후 과제)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주요국의 공시제도 발전 속도를 높이 평가함. 특히 한국은 제도 설계뿐 아니라 정책 방향에서도 국제 정합성을 가장 빠르게 확보한 국가 중 하나이며, ISSB와의 협력이 향후 아시아 지역 전체의 공시 표준화를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ISSB는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의체와 연계해 기술지원·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한국거래소와 KSSB의 참여는 글로벌 공시 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 평가됨

끝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단순한 데이터 보고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기업 전략과 시장소통의 중심이 되어야 함. 공시를 통해 기업의 위험요인뿐 아니라 성장기회를 함께 드러내야 하며, 이는 결국 '지속가능한 자본주의(sustainable capitalism)'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임

샘 프레스티지 ISSB 전략 리드

ISSB 기준 도입 현황 및 정책적 리더십

(ISSB와 ESRs의 상호운용성 확보 노력)

현재 ISSB는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과의 정합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이는 두 체계가 모두 투자자 대상의 지속가능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지만, 공시 구조와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임. ISSB는 투자자 중심의 일관된 공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IFRS 기반 산업별 지침과 기존 TCFD(기후관련 재무공시 권고안) 체계를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ESRS가 IFRS 산업별 공시지침을 참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긍정적 진전임. 이는 기업이 동일한 산업 내에서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게 하며, 국제 시장의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옴. ISSB는 이러한 산업별 세분화된 공시 구조를 기반으로, 공시의 실질적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

(투자자 중심의 정보 품질과 공시의 일관성)

ISSB 기준의 핵심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에 있음. 특히 '예상 재무영향' 항목과 같은 정량적 정보는 투자 의사결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선택적 공시로 전환될 경우 정보 품질 저하가 우려됨. 다만 EFRAG이 제안한 일부 조항은 투자자 중심 접근보다는 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ISSB의 원칙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투명성은 규제 부담이 아니라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이며, 정량정보의 일관적 제공이 국제적 신뢰 확보의 핵심임. 특히 ISSB가 발간한 교육자료에서는 예상 재무영향을 정량·정성적으로 병행 공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에너지효율 설비투자 계획에 따른 예상비용 범위 제시, 기후 리스크 증가로 인한 보험료 상승 추정 등은 투자자에게 판단 자료를 제공함.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리스크 공시를 넘어, 기업의 전략적 대응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함

(GHG 프로토콜과 향후 협의 방향)

온실가스 배출 공시의 조직경계 문제도 있음. ISSB 기준은 GHG 프로토콜에 근거해 배출량을 일관된 방식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EFRAG은 완전한 정렬을 채택하지 않았음. 이는 동일 기업이 ISSB와 ESRS를 동시에 적용할 때 계산방식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ISSB는 보고기업이 '비가림(non-obscured) 원칙'에 따라 투자자 중심으로 정보를 배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ESRS는 이해관계자 범위가 넓어 정보가 '가려질(obscured)' 가능성이 있음. 공시는 정보량이 아니라 명확성이 중요하며, 투자자 관점에서 쉽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

단순화는 때로 복잡성을 초래함. EFRAG이 제시한 일부 구체조항 확대는 오히려 양 체계 간 불일치를 심화시킬 수 있음. 예를 들어, ESRS가 ISSB보다 폭넓은 면제 조항을 두면 양 체계를 동시에 따르는 기업의 공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SSB와 EFRAG은 한줄 한줄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협의는 올해 11월까지 지속될 예정임

ISSB 기준을 도입하는 국가는 사실상 CSRD 준수도 같이 확보하는 셈임. 이는 한국·일본·호주 등 아시아 국가가 국제 공시 체계와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는 일임을 의미함

라클란 맥도널드-커 AASB 실장

호주 AASB의 기후공시 제정 경험과 단계적 이행전략

(‘기후 우선’ 기준 체계와 단계적 적용)

호주는 기후 관련 공시의무 도입을 전제로, IFRS S1·S2를 반영한 AASB S1·S2 체계를 마련했음. AASB S2는 의무 기준으로 적용되고, AASB S1은 자발적 확장을 위한 발판으로 둠. 정부의 ‘기후 우선(climate first)’ 기조하에 2023년 10월 공개초안을 발간했고, 120일간의 의견수렴과 1000건이 넘는 이해관계자 접점, 50여 건의 기술 검토를 거쳐 2024년 9월 최종 확정했음. 매우 촉박한 일정이었으나 국제 정합성을 최대로 유지하는 방향을 견지했음

의무공시는 규모·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함. 초기 단계에서는 제도 편입 대상이 가까워질수록 기업의 관심과 준비가 현실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인식 제고(awareness raising)’를 체계화했음. 이후 대상별로 맞춤형 자료와 도구를 제공하는 ‘이행 지원(implementation support)’ 단계로 넘어가며, 전 과정 하단에서 ‘증거 기반 평가’를 병행함. 이는 사후점검(PIR)과 국제 공조 논의의 근거가 되며,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실증을 축적하는 장치로 기능함

(지식허브와 교육자료의 현지화 전략)

시장에는 자료가 많지만 파편화돼 있다는 실무의견에 따라, 학습과 탐색의 출발점이 되는 지식허브를 구축했음. IFRS 재단의 교육자료를 토대로 하되, 호주 환경에 맞게 핵심은 유지하고 주변을 문맥화하는 원칙으로 현지화했음. 동시에 호주 정부기관이 공개한 기후정보, 예컨대 국가 기후리스크 평가에서 식별된 11대 국가 중요 리스크를 선별·연계해 기업들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음. 이는 공시 요구사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식별과 시나리오 설정, 정량·정성 판단의 출발점으로 쓰이도록 설계했음

(거버넌스 정렬: 자문패널-정책-감독의 동시 결합)

준비·보고 주체만이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자문, 이사회, 투자자, 보증 실무를 함께 엮어 움직여야 일관성이 생김. 이를 위해 비상임이사, 대형 투자자, 자문·보증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행자문패널을

구성해 기술 논의와 시장 적합성에 대한 양방향 피드백을 확보했음. 더불어 재무부(정책), AUASB(감사·보증), ASIC(감독·집행) 등과 교육·자료 공동개발 및 질의 상호공유 체계를 구축해 '기준-교육-집행'이 따로 노는 단절을 최소화했음

고비용·고난도라는 우려가 있음은 부정하지 않음. 그러나 기업은 준비 의지가 있고, 투자자는 이를 요구하며, 경제에는 장기적으로 이득이 돌아감. 핵심은 예측가능한 로드맵, 대상별 맞춤 지원, 국제 정합성 유지, 증거 기반 학습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관할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 가능하며, 초기의 체계적 인식 제고와 자료 허브 구축, 감독·보증당국과의 조기 공조가 성공의 관건이라 판단함

코이치로 쿠라모치 일본 금융청 수석회계관

일본의 단계적 지속가능성 공시체계와 금융시장 전략

(SSBJ 추진 배경과 ISSB와의 정합성)

일본 정부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금융시장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설정했음. 핵심 목표는 투자자가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평가하고, 기업과의 건설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임. 일본의 공시체계는 '재무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설계됐으며, ESG 정보를 단순한 사회적 책무가 아닌 투자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이터로 간주함. 이러한 접근은 ISSB의 목적과 궤를 같이하며, 특히 투자자 중심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시장 신뢰 제고라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

일본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SSBJ(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of Japan)를 통해 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ISSB 기준과 결과기반 기능적 정합성을 달성함. 이 결과는 ISSB가 발행한 'Jurisdictional Snapshot'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됐으며, SSBJ 기준은 ISSB 기준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결과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고 평가받음. 이 과정에서 일본은 국제적 비교가능성 확보를 중시했으며, 특히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ISSB 준거 방식을 선택함

일본 상장사의 상당수가 이미 CSRD나 캘리포니아 규제 등 다중 관할 공시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은 투자 접근성과 정보 효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임

(단계적 적용, 이행 유연성, 안전장치와 보증제도)

공시 적용 범위는 시장 규모와 투자자 구조를 고려해 '프라임 시장' 기업부터 순차 확대함. 1차년도에는 전체 시가총액의 50%를 포함하고, 이후 70%, 80%로 확장하는 구조임. 이는 대규모·글로벌 투자 유입 기업부터 우선 적용해 모범사례를 축적하려는 의도임

또한, 공시 일정과 준비 기간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2년의 전환기간을 두고, 초기에는 재무제표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별도 제출하도록 허용했음. 이로써 기업의 실제 데이터 수집·검증 부담을 완화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함

일본은 공시 정보의 특성상 미래예측·서술적 정보가 다수를 차지하고, 특히 스코프3 배출량처럼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함. 이에 따라 허위 기재나 추정 오차로 인한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세이프 하버'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임

이는 기업이 합리적 근거에 따라 정보를 산출했다면, 사후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형사·행정 제재를 일정 범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이 제도는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공시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균형장치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차원에서도 세이프 하버의 글로벌 정합성 논의가 병행되고 있음

일본은 공시제도 도입 1년 후부터 단계적 보증 의무화를 추진함. 초기에는 전체 공시가 아닌, 스코프1·2 배출량, 거버넌스, 리스크관리 등 핵심 지표 중심의 '제한적 보증'부터 시행함. 보증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이 실질적 대응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

보증 주체와 감독체계는 감사·보증 기준위원회와 협의해 마련 중이며, 향후 EU와의 상호 인정 가능성도 검토 대상임

(인적자본 공시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 구축)

일본은 2023년부터 인적자본 공시를 의무화했으며, 이는 ISSB S1의 방향성과도 연계됨. 재무제표에는 드러나지 않는 지식기반 산업의 가치 창출 요인을 가시화하기 위해, 고용·복지·직원 만족도·교육훈련 투자 등 비재무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함. 이러한 정보는 투자자가 기업의 전략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근거로 활용됨

현재 금융청은 해당 공시를 ISSB 기준에 맞춰 재정비 중이며, B3항의 예시처럼 '인적자본 활용과 가치창출의 연결고리'를 명시하는 서술형 공시를 권장함. 이는 일본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정책 축으로 자리 잡음

일본의 접근은 규제보다 신뢰를 전제로 함. 기업이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투자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를 지향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시장-기업-투자자 간 선순환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게 됨

이용희 KSSB 부위원장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제정 현황과 향후 과제

(KSSB 기준 제정 과정과 국제 정합성 확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는 더 이상 ESG의 하위 정책이 아닌, 국가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명확히 규정됐음. 해당 계획에는 ▲경제 체질 전환 ▲산업 혁신 ▲생산적 금융을 통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세 축이 포함돼 있으며, 지속가능성 공시는 이 목표들을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 잡음

정부는 공시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성장 전략의 핵심 도구로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산업 전환·에너지 전환·금융 혁신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정책 신호체계를 마련함. 특히 ‘KOSPI 5000 전략’과 연계해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며, 신뢰받는 자본시장 구축과 장기 투자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명시함

KSSB는 지난 2년간의 논의를 통해 공시기준 제정 인프라를 사실상 완성 단계로 끌어올림. 2023년 4월에는 제1호 ‘일반 요구사항’, 제2호 ‘기후공시’, 제101호 ‘정책·제도 공시’ 초안을 발표하고, 4개월간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음. 이 과정에서 총 256건의 서면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는 일본(104건)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임. 국내 기업뿐 아니라 노르웨이·네덜란드·캘리포니아 등 해외 연기금, UN PRI, MSCI, S&P, LGIM 등 글로벌 투자기관까지 의견을 제출함

국내 기업이 ‘수용성과 현실성’을 강조한 반면, 해외 투자기관들은 ‘국제 정합성과 비교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요구했음. 이러한 균형을 바탕으로 KSSB는 ISSB 기준을 최대한 정합적으로 반영하되, 기업의 준비 수준을 고려해 일부 항목을 선택 또는 유예 조항으로 설계함. 최종안에서 KSSB는 기후 관련 사항을 의무공시, 비(非)기후 사안을 선택공시로 구분했음

또한 스코프3 배출량의 경우 의무공시로 포함하되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 이 외에도 내부탄소가격, 안전·보건, 정보보안 등은 기업의 정책적 중요도에 따라 선택공시 가능 항목으로 분류함. 이 접근은 국제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기업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단계적 이행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즉 모든 선택공시 항목을 이행할 경우 ISSB 기준과 사실상 동등한 수준의 글로벌 공시 체계가 완성되도록 설계됨. 향후 기업 준비도와 국제 논의 결과에 따라 선택항목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임

(실효적 이행 지원 체계 구축 및 제도적 완결성 확보)

KSSB는 단순히 기준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기준-지침-교육-플랫폼으로 이어지는 4단계 이행지원 인프라를 구축함. 현재까지 17종의 교육자료를 개발했으며, 일부는 ISSB 교육자료를 번역·현지화한 것이고, 일부는 국내 연구진이 직접 개발한 실무 가이드임. 주요 내용은 FAQ, 적용범위, 스코프1·2·3 측정지침, 물리적 리스크 식별, 기후 시나리오 분석 등 기업이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됨.

또한 이행지원그룹을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분석·공유하고, 산업별 위원회를 통해 법령 대응 및 국가 입장을 조율함. 온라인 기반의 Q&A 및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시 실무의 누적학습 구조를 제도화하고 있음

KSSB 기준의 다음 과제는 이를 법적 공시체계 내에 편입하는 것임. 단순히 회계기준의 확장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정보가 재무제표와 동일한 수준의 신뢰성을 갖추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임. 사업보고서와 연계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필요함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좋은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제도적 구조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함. 이에 KSSB는 ISSB의 신규 의제(ex. 휴먼캐피털, 자연자본 등) 논의에 참여하며, 한국의 산업 현실과 경험을 국제표준에 반영할 계획임

Q&A

Q. IFRS 재단이 글로벌 공시기준의 확산과 신뢰 강화를 위해 직면한 도전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마사미치 고노 IFRS재단이사회 부의장) 글로벌 공시기준 확산은 일부 지역의 정치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진전되고 있음.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옴니버스 패키지는 공시 의무 간소화 과정에서 ISSB와의 상호운용성을 높일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임

미국의 SEC 역시 IFRS 재단의 모니터링 보드 구성원으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재무적 중요성에 기반한 고품질 회계기준의 유지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IFRS 재단의 재정은 ISSB 활동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두 조직은 행정·인사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음. 이러한 통합 운영은 효율성과 시너지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 회계 및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짐. 글로벌 자본시장의 건전한 기능을 위해서는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통 정보기준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재단은 효율성·투명성·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구조를 재정비하고 있음

Q.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책임투자의 일관된 이행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으며, 향후 자본시장에서 책임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은 무엇인가?

(데이비드 앳킨 UN PRI 대표) 책임투자는 20여 년 전 일부 자산운용사 중심의 개념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글로벌 주류 투자 철학으로 자리 잡음. 특히 자산소유자는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해 ESG 리스크와 기회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수탁자 책임(fiduciary duty)’을 지니며, 이러한 인식이 책임투자 확산의 기반이 됨. 현재 책임투자는 주식뿐 아니라 모든 자산군으로 확산됐으며, UN PRI에는 100개국 5000개 기관이 서명해 약 139조달러(약 187경6500조원)의 자산을 운용 중임.

책임투자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서는 신뢰 가능한 국제 공시체계와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며, ISSB가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투자자는 기업의 리스크·기회·전략을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길 원하며, 이를 위해 공통된 공시 기준과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함.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정치적 역풍이 있으나, 이는 오히려 금융정책과 민간자본 흐름을 정렬시키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자산소유자들은 기후변화가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중단하는 것은 수탁자 책임의 포기에 해당함. 실제로 미국 내 약 1000개 PRI 서명기관은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책임투자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음. 또한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진보된 기후공시법을 도입해, 기업의 공시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음. 결국 향후 5년은 각국이 공시체계를 공표에서 실행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될 것이며, 책임투자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을 것임

Q. KOSIF가 책임투자 확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은 무엇인가?

(양춘승 KOSIF 상임이사) 지속가능성 공시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명확한 시행 일정과 적용 범위의 확정이 무엇보다 중요함. 유럽·일본 등 주요국의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 역시 늦어도 2028년부터 대기업 중심으로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30년 초까지 제도 전면화를 완료하는 로드맵이 필요함. 특히 해외 투자자 노출이 큰 기업들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조기에 확보해야 글로벌 자본시장 내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음

또한 공시체계의 효율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공시 시스템의 표준화 및 공공데이터 연계 구조를 마련해야 함. ESG 데이터가 공시플랫폼을 통해 통합·비교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 체계의 자격·방법·품질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그린워싱에 대한 법적 규제와 명문화도 병행돼야 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명확한 공시 이행 시간표를 제시해 시장 참여자들이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일정과 지원 체계가 확립돼야 기업, 투자자, 시민사회 모두가 일관된 목표 아래 움직일 수 있으며, 제도의 신뢰성과 실행력이 함께 확보될 것임

Q. 지속가능성 공시제도가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설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함. 공시제도를 규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혁신과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전환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첫째, 단계적·비례적 적용 원칙이 필요함.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에 따라 공시 범위와 깊이를 차등화하고, 스코프3와 전환계획 등 불확실성이 높은 항목에는 한시적 면책 규정을 두어 선의의 오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함. 둘째, 국제 정합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함. 유럽·일본 등 주요국의 로드맵과 일정 체계를 고려해 중복 보고를 줄이고, 다양한 보고서가 단일 창구에서 통합 관리되는 체계를 통해 기업의 행정·감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셋째, 공급망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국가 주도로 공급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납품·조달·공시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지원해야 함. 넷째, 인센티브 중심 정책 패키지가 필요함. 성실·우수 공시 기업에는 정책금융, 보증, 세액공제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공시의 동기를 높여야 함. 마지막으로 감독책임의 합리화가 요구됨.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선의의 오류에 대해서는 형사·행정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고, 민사책임 역시 합리적 주의의무 기준으로 판단하는 규정이 필요함

결론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행하는 플랫폼으로 설계돼야 함. 이러한 환경이 마련돼야 기업은 공시를 의무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고, 혁신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음. 그 결과는 한국 경제 전체의 신뢰도와 지속가능 성장 역량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임

Q. 명확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제시될 경우 투자기관의 의사결정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국민연금이 특히 중시하는 로드맵 요소는 무엇임?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 실장) 국민연금은 ESG 평가 결과를 국내외 주식·채권 운용에 직접 반영하고 있음. 거버넌스 지표는 대상 기업의 데이터를 얻지만 환경·사회 지표는 공개 수준이 대략 50~70% 수준에 그침. 따라서 로드맵이 명확해지면 정보의 질과 비교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운용 의사결정의 정확도가 개선됨. 공시는 자율이 아닌 의무화가 필요하며, 제3자 검증(보증) 의무화까지 병행돼야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됨

공시 정보는 현금흐름, 자본비용 등 재무성과와의 연결이 함께 제시돼야 하며, 비교가능성은 기업·업종·산업·국가·지역 간 수준까지 확보돼야 함. 이를 위해 ISSB, ESRS 등 국제 기준과 최대한 동일한 체계로 맞추는 것이 핵심임. 질 높고 비교 가능한 정보는 규제·물리적 위험의 식별과 신기술·신시장 기회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과 기금의 재정 안정성 제고에 기여함

Q. ISSB의 현 단계 주요 과제로는 IFRS S1·S2의 이행 지원, SASB 기준의 개선, 신규 지속가능성 주제 연구, ESRS 등 타 체계와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포함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ISSB가 직면한 핵심 도전 과제는 무엇임?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 현재 ISSB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속도와 완성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임. 새로운 공시 주제를 계속 추가하고자 하는 유혹이 크지만, 기후공시(S2)와 일반공시(S1)만으로도 기업에 상당한 변화와 부담을 주고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확장보다 이미 제정된 공시기준의 이해·이행 역량을 충분히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함

또한 ISSB는 규모가 작은 글로벌 조직으로서 전 세계적 기준선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회계기준위원회, 회계업계, 투자자 단체 등과 협력해 역량 강화와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향후 신규 주제 논의에서도 기존 IFRS S1 기준이 이미 일정 수준의 보고를 가능하게 함을 고려해, 필요 시 TNFD 등 기존 자료를 활용·연계해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접근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ISSB는 단순한 기준 제정기구를 넘어 규제기관, 감사인,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생태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즉 완벽한 공시를 즉시 요구하기보다 시장이 학습하고 발전할 시간과 여유를 보장하는 점진적 접근이 중요함

Q.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기준)의 완성 단계 이후, 의무공시 제도화 추진 계획과 정부의 준비 상황은 어떠한가?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현재 정부는 ESG 공시 인프라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포함하며, 생산적 금융과 성장을 연계하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총 42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수립했으며, 민간은행의 출자를 통해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기후기술 투자에도 추가로 약 9조원을 투입 중임

이러한 금융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제도와의 연계가 필수임. 이에 따라 2022년 12월 공개된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은 ISSB 기준을 근간으로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하되, 국내 기업의 이중 보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EU 등 주요국 기준과 상호운용 가능한 형태로 설계됐음

공시는 우선적으로 기후 분야를 의무화하고, 그 외 지속가능성 주제는 기업의 자율공시로 두는 단계적 접근을 택했음. 초안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국내 투자자 29개 기관, 해외 투자자 1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기후공시의 의무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음. 다만 연결공시 기준, 정책공시의 범위 등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기업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우수사례 제공, 실무 교육 강화를 요구함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단계적·비례적 시행, 면책조항, 인센티브 부여 등의 세부 제도 설계를 병행할 계획임. 또한 기업의 공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공시 작성 지원 체계를 확대할 예정임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법안 개정 논의 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임. 정부는 가능한 한 늦지 않게 시행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공시 제도를 국제적 신뢰성과 국내 기업의 수용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계획임

조사 및 작성

임팩트온 고현창 연구원

jameskhc@impacton.net